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같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창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처음엔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갈까 싶어 미려니 했다.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한데 산발적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도 어느덧 다섯 달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물론 봉쇄의 빗장을 풀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치료제, 내년 백신 확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목표대로 이뤄진다 해도 갈 길이 멀다.

코로나 사태는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중 첫순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우수성이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진단과 추적·치료를 할 수 있었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

코로나가 일깨운 '자치 분권'의 저력

탕으로 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모두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바이러스는 또한 우리 스스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사회의 '악한 고리'를 먼저 노린다는 점도 깨닫게 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나 물류센터, 손쉬운 해고에 노출된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인이나 빈곤층 등 재난 약자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며 희생을 강요한다는 사실 말이다.

지자체들 창의적 대안 제시

코로나 사태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와 지방분권의 힘이다. 방역 행정의 최일선에 선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장의 실상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 차단과 민생 악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고 창조적인 대안을 앞다퉀 제시하고 실천했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를 처음 설치한 것은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시였다. 자동차를 탄 채 문진과 검체 채취를 한 뒤 차량 소복까지 단 10분 만에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확산됐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 운동'과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으로 대량 해고를 막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실험에 나선 것도 전주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였다. 이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으로 이어졌고, 전국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불씨를 맺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나 해외 입국자 안심 귀가 서비스, 부족한 병실을 대체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제안하거나 시행한 것도 지방정부가 먼저였다.

광주시의 선제적인 방역 행정도 주목을 받았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 의료진이 시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 대응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신천지교회의 환자가 확산할 초기에는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대구 교회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 냈다. 그 결과 광주의 확진자는 현재 33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그뿐이 아니다. 입원 병실이 부족해 애타우던 대구 확진자들을 광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한 '병상 연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간 나눔과 협력의 본보기로 꼽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 아래 지역사회의 '악한 고리'를 먼저 찾아내 방역과 민생 안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지방자치체 부활 30년이 넘도록 재정과 권한에서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적박한 현실에서 이루어 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하겠다. 지자체의 정책이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에 확산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K방역 성공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추세를 볼 때 코로나19와 같

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수년 주기로 되풀이된다. 더군다나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 반복되는 국가 재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내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 분배

행정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다. 재정·사무 등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지자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 활성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이는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이며, 이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

다. 최근 이 돌기 부분의 변형으로 바이러스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010년의 구제역 파동이 최근 10년 동안 반복되었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소, 돼지가 살처분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민과 불안의 감정과 함께 공중파를 통해 퍼져 나갔다.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도 피할 수 없었다. 구제역 파동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면역력의 감소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면역력이 높아도 바이러스 감염증을 피할 수는 없다. 방역의 차원에서는 공장식 축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장식 축산을 탓하지 말고 이러한 공장식 축산을 필요하게 했던 우리의 먹고 입는 습관, 특히 과도하게 육식으로 편향되고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일에 무관심했던 먹는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

구제역 파동 후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19로 이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의 계속되는 전파로 인한 '확산과 감염의 공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단절과 빈곤의 공포'와 함께 더 커져갔다.

죽고 사는 일에 먹고 사는 일이 합쳐져 더 힘들어졌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의 또 다른 주인인 동물들의 세상으로부터 사람 세상으로 전파되었고 그 전파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동물 세상의 바이러스가 사람 세상으로 옮겨오자 신·변종 바이러스로 모습을 바꿔 가며 문제를 일으켰다. 너무 멀리, 너무 깊숙이 그들의 세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파괴했다. 자연 파괴는 필연적이었다. 개발의 탈을 쓴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는 좀 줄이고 그들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세상은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 줘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정서적 거리 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런 거리 두기가 오랜 기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

지만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도 그리고 가보지도 못한 길이다. 반가움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정서적 거리를 가까이해 서로 다독이는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체에 감염된 생명체를 병원체 그 자체와 동일시하여 '불가피한' 거리 두기가 아닌 '감정적 혐오'의 거리 두기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 우리들의 안전, 자유 그리고 자존감을 위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물리적 거리 두기'와 '방역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 가용 병상 준비,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 선제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착하고 현명한 거리 두기와 '코로나와 함께'로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코로나 확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세상을 바라보며 숨고르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바꾸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하다.

코로나19로 달라지는 농촌

나 계곡에서 힐링을 하던 일상의 여유도 이제는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당연하게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어 오프 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만나서 얼굴 보며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단계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농업도 자동화가 되어 사람의 일손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농촌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반드시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서로 어울려 지내며 일손을 보태고 도와주면서 자식 같은 농산물에 건강한 먹거리라는 자부심을 넣어 판매하는

곳이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농촌의 소식, 농산물의 시세 등을 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도 이 곳이다. 앞으로 비대면 접촉을 일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19의 창궐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인식과 소비·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또 농촌의 일손은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 것이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짧은 주기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지속적인 생성으로 인하여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나라가 빗장을 채우고 출입을 제한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 부족을 호소했고, 인건비마저 폭등하자 농

민들이 어쩔 수 없이 파종과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동이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했고, 농촌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 기회에 농촌과 농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가능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잘 헤쳐나가기라 믿는다.

社說

지역 미래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그제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는 이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 자리를 창출하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국 최초의 AI 실증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말한 이용섭 시장은 "11월 착공할 데이터센터는 세계 10위권의 용량과 성능을 지닌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 규정 마련과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도는 30년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과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또한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 500억 원의 보조금 지원과 최장 5년 공방 부지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뒷받침을 부탁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을 요청한 지역 현안 사업은 각각 여덟 개씩으로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들이다. 광주·전남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당정은 이런 점을 감안해 광주·전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 사기 사건 피의자 못 잡나 안 잡나

광주에서 최근 발생한 수백억 원대 대형 사기 사건 피의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답답할 뿐이다. 11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지난 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과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액은 무려 76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고 한다. 10여 일 전에 잠적한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세 명이나 되지만 경찰은 그 중 한 사람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지역 건설업계 대표나 의사 등 지역 유력 인사들로부터 400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후 달아난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완벽히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특히 피해 사실이 신고된 지 2개월이 넘어서 지금까지도 A씨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 5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매했다"며 처음 사기 고소가 접수됐을 당시인 지난 1월에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검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의 말대로 수사 의지 부족이었던지 혹은 초동수사 부실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찰이 지금 불신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모아 사기 사건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빠른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은 최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여기에 휴전선 인근에 군 부대까지 배치했다. 2년 전인 200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때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장밋빛이었

다. 남북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곧바로 실현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교류는 사실상 그 어느 것 하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는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6·15선언'은 2000년 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선언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역인 '4·27 판문점 선언' 역시 6·15 합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서명한 문서이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 문제에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서면서 9년 간 남북은 다시 냉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찾아온 2018년 남북 관계의 봄이 위기에 봉착했다. 그동안 공들여 온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는 안된다. 내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름답고 가슴 벅찼던 만남으로 남북 정상이 애써 합의한 공동선언문들이 휴지 조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6-15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9-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박설혜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된 뉴노멀(New Normal : 새로운 표준) 시대에 산업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쉬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는 문화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람이 붐비던 식당이나 카페가 한적하다. 팽팽 돌아가던 세상이 느슨해졌고 봄, 여름이 오면 농촌을 찾고, 숲 체험이